

쌀 직불금 문제를 풀어내려는 자기 반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저희 중앙 임직원과 충청도연합회, 태안군연합회 회원 50여명이 태안읍 장산2리에 모여 논벼를 갈아엎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많은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했는데, “농협 임직원 성과급 지급 규탄, 쌀값 보장 촉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게 바로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위공직자 부당 수령”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쌀 직불금 파동과 논벼 갈아엎기 때문에 저와 중앙연합회 직원들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예 쌀 직불금을 없애버리자”, “지난 정권 혹은 현 정권 탓이다” 등등 시끌벅적합니다. 임차농의 입장에서 부채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는 아픔을 겪은 농민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쌀 직불금 파문을 계기로 억눌렀던 농심이 붓물 터지듯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TV 뉴스를 보니까, 이번 파동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심층 분석을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2005년 초, 쌀 관세화유예 협상이 끝난 직후에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관계자와 농림부 고위 공무원까지 나서서 “부채지주 같은 불법 수령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이런 우려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쌀 직불금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한농연도 “추곡수매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제도 변경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보지 않고, 쌀 재협상 파문을 가라앉히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고쳐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알아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되,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쌀 직불금 문제입니다.

11월 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내용부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인사들 모두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들이 이해당사자인 350만 농민들의 한맺힌 사연은 제대로 듣고 계신걸까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쌀 직불금과 관련된 구구절절한 국민들의 하소연은 제대로 헤아리고 계신걸까요? 혹시나 350만 농민과 국민들을 볼모로 한 무한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겸허한 자기 반성과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